

시 보

선	기관의 장
람	

all ways INCHEON

제2153호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7063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조례 제7064호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5
○ 인천광역시조례 제7065호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
○ 인천광역시조례 제7066호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 인천광역시조례 제7067호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14
○ 인천광역시조례 제7068호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27
○ 인천광역시조례 제7069호 인천광역시 통·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	34
○ 인천광역시조례 제7070호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 인천광역시조례 제7071호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 인천광역시조례 제7072호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 인천광역시조례 제7073호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49
○ 인천광역시조례 제7074호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 인천광역시조례 제7075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54
○ 인천광역시조례 제7076호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7
○ 인천광역시조례 제7077호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60
○ 인천광역시조례 제7078호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67
○ 인천광역시조례 제7079호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75
○ 인천광역시조례 제7080호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9
○ 인천광역시조례 제7081호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83
○ 인천광역시조례 제7082호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87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공보담당관실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177호 도시관리계획(북산역사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99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181호 인천광역시 버스전용차로(송림로) 폐지 고시 103

조 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063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697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23년 7월 14일”을 “2025년 7월 14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자율신설기구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이 2023년 7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율신설기구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변경함.(부칙 제2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064호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5. 재원조달
6.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연계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심리·정서 상담

4. 자조(自助)모임 지원

5. 경계선지능인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경계선지능인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7.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 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함.(제5조)
- 라. 정책추진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065호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3. 그 밖에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3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정기 공시하기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 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장의 제목 “지방재정 공시 및 재정운영상황 의회 통보”를 “재정운영상황 의회 통보”로 한다.

제93조를 삭제한다.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포함되어있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개별조례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제1조)

나.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는 사항을 규정함.(제2조)

다.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라. 의견 청취 및 위원회의 간사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066호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서개발계정”을 “주변개발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 중 “도서개발계정”을 “주변개발계정”으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서개발계정”을 “주변개발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석탄 화력발전소”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화력발전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우선순위는 재정여건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안전·방재대책, 환경개선 등 사업발굴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변경하고, 석탄·LNG 등 화력발전소 소재지로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개정함.(제2조)

나.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고, 재정여건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함.(제4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067호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6조,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군·구의 조정교부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와 군·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정력 격차 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96조,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군·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일반조정교부금”이란 군·구의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도록 지출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3. “특별조정교부금”이란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나 특별한 재정보전 필요에 따라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4. “기준수입액”이란 각 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기준수요액”이란 각 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6. “측정항목”이란 각 구의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공통, 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7. “측정단위”란 측정항목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8. “단위비용”이란 기준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단위당 비용을 말한다.

제3조(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의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군에서 징수하는 시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발전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의 총액
2. 시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시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시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③ 구의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른 시세 중 보통세(군의 조정교부금 산정에 산입되는 제2항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④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각각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각각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예산편성) ① 시장은 매년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시세에 현저한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교부금도 증감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시세의 예산액과 그 결산액과의 차액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군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군의 일반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인구수, 시세징수율 및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7조(구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① 구의 일반조정교부금은 매년도 기준 수입액이 기준수요액에 못 미치는 구의 그 미달액(이하 “재원부족액”이

라 한다)을 기초로 산정한다.

② 구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 조정률로서 조정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의 조정률과 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준수입액) ① 기준수입액은 구의 해당 연도의 지방세 및 경상적세의 수입 징수결정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기준수입액과 결산으로 인한 조정교부금 차액은 그 다음 연도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정산한다.

③ 시장은 구 간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산상 잉여금, 임시적 세외수입 등으로 기준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제9조(기준수요액) ① 기준수요액은 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에 해당 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고정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별 측정단위는 별표 1과 같으며, 측정단위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기준수요액의 측정항목별 단위비용과 고정비용은 매년 구의 전년도와 전년도의 직전 2개년도 당초 세출예산 중 국·시비 등 보조금 예산을 제외한 세출예산을 보편적·공통적 기준으로 분석하여 측정항목별 회귀방정식을 구하여 산출하며, 그 결과를 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단위비용 및 고정비용 산출기준, 전년도와 전년도의 직전 2개년도 당초 세출예산의 연도별 적용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준수요액의 산정에 있어서 구간의 형

평을 기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항목의 기준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의 사회복지비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우선 보전할 수 있다.

제10조(건전재정 자체 노력 반영) 시장은 구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 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기준수입액과 제9조에 따른 기준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세입증대와 세출효율화를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일반조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자료제출) ① 시장은 매년도 해당 군·구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군수·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산정자료에 대하여 이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 통보)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군·구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의 결정을 해당 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조정교부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통보한다.

제13조(일반조정교부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군·구의 일반조정교부금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매 분기마다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구의 재정상황,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한다.

1. 군의 일반조정교부금과 구의 기준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2. 청사 그 밖에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3. 지방세제 개편 또는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의 개정 등으로 현격한 재원 감소나 구간 큰 재정격차가 발생하여 재정보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경우
5. 지역개발사업이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③ 특별조정교부금은 매년 군·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일괄적으로 이를 교부하거나 군수·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특별조정교부금은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조정교부금의 감액 또는 반환 등) ① 군·구가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받으려는 때에는 시장은 해당 군·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수·구청장에게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 또는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군수·구청장이 특별조정교부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여 부당하게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거나 받으려 한 때
2.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행정적 절차상 하자 등 군수·구청장의 귀책 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5. 군수·구청장이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조정교부금

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액하거나 반환한 금액은 다른 군·구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다음연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할 수 있다.

제16조(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결산 확정 후 2개월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통보된 군·구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 명세와 해당 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구명
2. 교부일자
3. 사업명 및 사업내용
4. 교부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구역변경·폐치·분합 시 조정교부금의 조치) 군·구의 구역변경 또는 폐치·분합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군·구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1. 둘 이상의 군·구가 합하여 새로운 군·구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군·구에 교부할 조정교부금을 그대로 새로운 군·구에 교부
2. 군·구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군·구가 둘 이상의 군·구로 분할 설치된 때에는 새로운 군·구에 교부할 조정교부금은 종전의 군·구에 교부할 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조정교부금위원회) ① 시장은 조정교부금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위원회를 둔다.

1.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운영 기준 개정에 관한 사항
2. 조정교부금의 감액 또는 반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9조(재정진단) 시장은 조정교부금의 효율적 운영과 군·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군·구에 대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제57조부터 제68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제9조제2항 관련)

측 정 항 목		측 정 단 위	단 위
분 야	부 문		
일반공공행정(010)	일반행정비	인구수	명
공공질서 및 안전(020)	민방위비	인구수	명
교육(050)	평생·직업교육비	학교수	개
문화 및 관광(060)	문화예술·관광비	인구수	명
환경보호(070)	청소행정비	쓰레기배출량	t/일
사회복지(080)	국민기초생활보장비	기초생활수급자	명
		노인수	명
		장애인수	명
		영유아수	명
		인구수	명
보건(090)	보건위생비	인구수	명
농림해양수산(100)	농수산비	행정구역	km ²
산업 및 중소기업(110)	지역경제비	사업체수	개
수송 및 교통(120)	교통관리비	개설도로면적	km ²
국토 및 지역 개발(140)	도시행정비	공시지가 총액	억원
기타(900)	행정운영비	공무원수	명

※ 제6조제8항의 사회복지비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우선 보전할 경우 측정단위표의 사회복지분야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2]

측정단위 산정기준(제9조제2항 관련)

측 정 단 위	산 정 기 준	단위
1. 인구수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당 자치구의 주민수	명
2. 학교수	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따른 해당 자치구의 초·중·고등학교수	개
3. 쓰레기배출량	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따른 해당 자치구의 쓰레기배출량	t/일
4. 기초생활수급자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해당 자치구의 수급자수	명
5. 노인수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당 자치구의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수	명
6. 장애인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	명
7. 영유아수	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따른 해당 자치구의 0세~5세 인구수	명
8. 행정구역	「지방자치법」에 따른 해당 자치구의 관할구역 면적	km ²
9. 사업체수	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따른 해당 자치구의 사업체 수	개
10. 개설도로면적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해당 자치구가 관리해야 할 도로면적	km ²
11. 공시지가 총액	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따른 해당 자치구의 토지가격 총액	억원
12. 공무원수	「지방자치법」에 따른 해당 자치구의 지방공무원 정원	명

◇제정이유

조정교부금 교부사업의 정보공개 기준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감액 및 반환 기준 등을 신설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조정교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찾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소관 사무에 맞게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분리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조정교부금의 종류, 재원,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나.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 다. 기준수입액, 기준수요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 라. 건전재정 자체노력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 마. 조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 바.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 통보,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및 제13조)
- 사. 조정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
- 아. 조정교부금의 감액 또는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 자. 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
- 차. 구역변경·폐치·분합 시 조정교부금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7조)
- 카. 조정교부금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
- 타. 재정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9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068호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단체 또는 법인이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세와 시 관할 군·구의 군·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선정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세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매년 2건 이상 납부기한 까지 전액 납부하였을 것. 이 경우 지방세 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제4조(선정대상 후보자의 추천)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 개인의 주소지 또는 단체·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이하 “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제3조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다만, 선정기준일 직전 5년 내에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 추천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 후보자의 추천인원을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의 인원규모 등 납부현황을 고려하여 군·구별로 배정할 수 있다.

③ 군수·구청장의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의 추천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무작위 전산추첨 방식으로 한다.

제5조(선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자 선정결과를 군수·구청장 및 성실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선정 인증서 교부: 별지 제1호서식
2.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실납세자 명단 공개 등 홍보
3. 인천광역시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금리 및 수수료를 성실납세자 선정일부터 1년간 우대
4.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료를 성실납세자 선정일부터 1년간 경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한정한다)
5. 지방세 세무조사(「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를 말한다)를 성실납세자 선정일부터 3년간 유예. 다만, 유예기간 내에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지방세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에 관한 납세담보를 성실납세자 선정일부터 2년간 한 번만 면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7조(선정취소 등)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를 탈세하거나 체납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6조의 우대 및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관리대장) 시장은 성실납세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실납세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성실납세자 선정 인증서

번 호: 0000 - 0000호

유효기간: 0000. 00. 00. ~ 0000.00.00.

성 명(단체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법인등록번호):

위 사람(단체·법인)은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음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별지 제2호서식]

성실납세자 관리대장

(년도)

번호	선정 연월일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유효기간

◇제정이유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로 납세의식 고취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 다.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라.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의 추천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마. 성실납세자 선정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바.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사. 성실납세자 선정의 취소, 우대 및 지원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아. 성실납세자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통·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069호

인천광역시 통·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통·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이·통장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이·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관할 군·구의 이장·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회원”이란 연합회의 회원으로 있는 이장·통장을 말한다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에 대한 시정(市政) 홍보사업
2. 연합회원의 역할에 대한 의식제고 및 시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소양교육
3. 연합회원의 시정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사업
4. 그 밖에 연합회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우) 시장은 연합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연합회원에 대한 포상
2. 그 밖에 연합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군·구 표기순서를 반영하여 통·리장을 이·통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합회의 정의, 지원사항 및 예우에 관한 근거 규정 등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통·리장 명칭을 이·통장으로 변경함.(제명 및 제1조)
- 나. 연합회 및 연합회원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 다. 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라. 연합회원 예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제4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070호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를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로 한다.

제2조 중 ““재해구호사업”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응급적인”을 ““재해구호사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은”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6조) 제1항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를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시민안전본부장

2. 기금출납원: 재해구호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보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 구호기준,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재해구호사업의 범위를 자연재난에서 재난으로 확대함.(제2조)
- 나. 기금의 용도를 「재해구호법 시행령」을 인용하여 명확히 규정함.(제4조)
- 다. 구호기준, 회계관리,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삭제)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071호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해 적용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설치)”를 “(빛공해방지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시장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으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빛공해방지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수립·시행”을 “수립·변경”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무관이 된다”를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빛공해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경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빛공해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빛공해 또는 인공조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궐위원”을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절차법」 제46조”를 “「행정절차법」 제46조”로 한다.

제12조 중 “설치하려고 하는”을 “설치하려는”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위원회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청렴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함.(제5조)

나. 위원의 자격을 담당업무로 변경함.(제7조)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함.(제8조의2)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072호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이”를 ““시장”이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시민”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와 제4조”를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범위”를 “범위”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근로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촉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나.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라. 인권, 여성노동, 직업의학 분야 등 감정노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또는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 또는 자문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있을때”를 “있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성격상”을 “성격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전담기관”라”를 ““전담기관”이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감정노동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 감정노동 종사자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5. 감정노동 종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개정이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기능이 유사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장위원회와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근거를 신설함.(제11조제1항 제5호 및 부칙 제2조)
- 나.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해당 조항의 경과조치를 신설함.(제11조의2 및 부칙 제3조)
-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제11조의3)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073호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및 관련 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
2.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의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대행한다”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가 대신한다”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를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가 대신한다”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개정이유

데이터산업 관련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한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명확히 함(제9조)
- 나. 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함(제10조)
- 다.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1조의2)
- 라. 유사 위원회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부칙 제2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074호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규모 사업장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해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대상을 영업용(업무용)을 제외한 취사용·주택난방용(주택용)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원대상을 영업용(업무용)까지 확대(대규모 사업장은 제외)함으로써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연료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한 에너지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 시 대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영업 및 업무용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함(제4조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075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임의관리대상”을 “소규모”로 한다.

제3조 중 “임의관리대상”을 “소규모”로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동주택관리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건축사,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건축 분야 구조·시공 기술사
4.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5. 관리주체(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는 주택관리사를 포함한다)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3제2항 중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구, 관련 기관·단체,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의3(수당 등) 위원회, 지원위원회, 감사반, 자문단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 지원 및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등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및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소규모 공동주택을 규정함(제2조제4호)
- 나.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설치 관련조항을 신설함(제5조의3)
- 다. 협력체 구축 관련 조항을 신설함(제18조의1)
- 라. 수당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18조의2)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076호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에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4. “공원조성계획”이란 공원의 공간배치 및 공원시설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공원 등에 맨발산책로, 세족대(洗足臺)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원 내 도로 일부에 맨발산책로를 반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맨발산책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인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결 녹지 조성 등 공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2. 맨발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3.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4. 맨발걷기 관련 문화·예술·학술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에 맨발걷기 관련 사업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함(제1조)

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라.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함(제4조)

마.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077호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를 글로벌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경제환경과 생활여건을 갖춘 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글로벌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인들이 경제활동을 하기에 좋은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혁신적인 도시구조·정주여건·법제가 완비되어 세계 정치·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글로벌도시 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글로벌도시 구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글로벌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2. 글로벌도시 조성 정책의 목표 및 전략
3. 글로벌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 체계
4. 그 밖에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글로벌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점검·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군수·구청장,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제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글로벌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로벌기업, 앵커시설 등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및 관련 행사
2. 외국인·재외국민 등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및 관련 행사

3.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

4. 그 밖에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시장은 글로벌도시 조성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 및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 홍보를 위하여 시민참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글로벌도시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 도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80명 이하의 자문단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소속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금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신산업 및 창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항공산업 및 항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도시계획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단의 해당 안전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단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특정 분야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해당 분야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자문단은 원활한 자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련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

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과제 도출 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단장이 정한다.

제16조(간사) 자문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글로벌도시 조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18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정 이유

인천이 가진 경쟁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 정치·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글로벌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나. 글로벌도시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다. 글로벌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라. 글로벌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마.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9조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078호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물포르네상스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물포르네상스는 시민소통과 함께 지역·계층·세대 간 격차 없는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 신성장기반을 창조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물포”란 중·동구 원도심, 인천항 내항과 그 주변지역으로써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제5조의 제물포르네상스 종합계획에 명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제물포르네상스”란 제물포를 문화와 관광·산업이 융합되는 신성장
 도심으로 재탄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의 원도심으로 확산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민은 미래 세대를 위한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물포르네상스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를 종합적이고 체계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물포르네상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물포르네상스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제물포르네상스의 지역적 범위 및 주요 시책
 3. 중앙정부, 군·구 및 관계 기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
 4. 대시민 소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 시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
 하여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시장은 제5조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의 효과적 추진과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법령과 규제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원도심, 산업·경제, 문화·관광, 항만 재개발 업무 관련 실·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제물포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제물포를 관할하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라. 원도심 활성화·항만 재개발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제물포르네상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물포르네상스 정책의 기획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부검토 과정에 있거나 정책집행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원도심 분과위원회

2. 내항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씩 두되, 각 간사는 제물포르네상스 원도심 활성화 사업 담당과 내항 재개발 사업 담당이 된다.

⑤ 분과위원회의 자문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위원회의 자문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공·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조사·연구의 의뢰) 시장은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에 필요한 경우 중앙 정부, 군·구 및 민간기관 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소통 및 홍보)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 및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등 소통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지원) 시장은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이 추진하는 제물포르네상스에 관한 조사·연구, 소통 및 홍보 등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준속기한) 위원회의 준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정이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한 선도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의 기본 이념을 정립하고, 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제물포르네상스의 기본이념을 정립함.(제1조 및 제2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3조)
- 다.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 라. 제물포르네상스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마.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14조까지)
- 바. 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 협력체계 구축, 소통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사.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부칙 제2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079호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지역보건의료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혈액관리법」 제4조제3항, 제4조의4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3항, 제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의 개정)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제7조(「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제8조(「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

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제9조(「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0조(「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제11조(「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각각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장의 직제를 변경하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한 조문 및 기관 명칭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11개 위원회의 위원장 직제를 변경함.(제1조부터 제11조까지)

나. 상위법령 인용 조문, 기관 명칭을 정비함.(제4조 및 제9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080호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립 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고, 같은 법 제23조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 762번길 123에 둔다.

제4조(기능)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2. 그 밖에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제5조(입소 대상 등) ① 요양원의 입소 대상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3. 「노인복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소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입소신청을 해야 한다.

제6조(입소 비용) 요양원의 입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 비용을 부담한다.

제7조(퇴소) 시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3.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6조에 따른 입소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탁) 시장은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요양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탁 기간) 요양원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운영비 등) 요양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시설급여 비용과 입소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고령인구 증가 양상과 더불어 노인성 질환 유병률 증가에 따라 노인성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다. 입소 대상, 입소 비용 및 퇴소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라. 위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081호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준비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준비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6.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자립지원전담기관)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

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2.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3.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
4. 지역사회 자원 발굴·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
5. 자립준비청년의 자조(自助)모임 모집 및 운영
6. 자립준비아동 자립을 위한 업무지원 및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
7.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자립생활관)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주거 안정 및 체험·교육·상담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립생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규정함.(제6조)
- 라. 자립생활관의 설치·운영을 규정함.(제7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7082호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소방설비등”이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설비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설비를 말한다.

3.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소방설비등의 지원) ① 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으로 한다. 다만, 관계인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동일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을 신청한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소방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및 화재·재난·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거나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과 협의하여 소방설비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설치비용의 적절성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적절성

3.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시설등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방본부 예방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본부 예방업무 담당 소방령 및 소방서 예방업무 담당 과장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교수 이상으로 화재안전 또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본부 소속 예방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 · 의결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위원의 친족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해당 안건의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 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해당 소방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이거나 그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나. 해당 소방대상물의 설계, 공사, 감리 등을 수행한 경우
 - 다. 해당 소방대상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우선지원) 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비용지원 및 정산)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신청 결과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설치한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제12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방설비등의 범위(제4조제2항 관련)

구분		소방설비등 종류
소방 설비	소화 설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경보 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 림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 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시각경보기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 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방용수장비 포함), 소화수조, 저수조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기타설비	비상소화장치, 방재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안전 설비	예방설비	아크차단기, 누전차단기, 가스차단기, 화재감시용카메라
	대응설비	방수총, 대용량방수포, 포모니터노즐설비, 수막설비(미분무설 비를 포함한다)
	피난방화설비	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방화문을 포함한다), 방화포 또 는 방화천막, 소방관진입창

※ 소방설비등 정의

- 소방설비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 아크·누전·가스차단기는 전기·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로 전기·가스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 화재감시용카메라는 화재발생을 감지(자외선, 적외선 등)하여 관계인, 소방관서

등에 통보하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방수총은 배관에 고정된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물을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대용량방수포는 대량의 물과 포를 혼합하여 대용량의 포를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포모니터노즐설비는 배관에 고정된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포를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수막설비는 건축물 등의 내외부에 설치하여 수동 또는 자동으로 의하여 방수된 물의 수막작용에 의하여 화재의 연소확대를 방지하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은 화재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화재안전성능이 있는 천막 등을 말한다.
- 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 소방관진입창은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소	대상명			용도	
	주소			수용인원	
□ 설치 □ 보수 □ 보강	□ 소방설비	□ 소화설비	()		
		□ 경보설비	()		
		□ 피난구조설비	()		
		□ 소화용수설비	()		
		□ 소화활동설비	()		
		□ 기타설비	()		
	□ 안전설비	□ 예방설비	()		
		□ 대응설비	()		
		□ 피난방화설비	()		
신청금액	설치비용(천원)				
	산출근거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처리기관 (인천광역시장)	→	결정(심사) 처리기관 (인천광역시장)	→	통 보 처리기관 (인천광역시장)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호서식]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신청인	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장 소	대상명			주 소	
지원금 지 급	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
	②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금 지급
-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원의 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기간은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합니다.
-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지원금 지급 등이 불
편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정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지역이나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등 구조적 특성상 화재 위험이 큰 지역인 화재예방강화지구에 필요한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소방설비등의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다. 소방설비등의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마.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의 우선지원 및 지원절차와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177호

도시관리계획(북산역사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북산역사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군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북산역사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을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032-458-7037), 강화군 산림 공원과(032-930-3468)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 07. 14.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공원: 북산역사공원)
2.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782-1번지 일원
3. 면 적: 12,299m²
4. 도시계획시설(공원 : 북산역사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붙임 1]
5. 지형도면: 시보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붙임 1]

도시계획시설(공원:북산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782-1번지 일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계			19,728.0	2,070.09	1	45.22	45.22	9	12,299.0	1,939.29	-	-	-	9	부지면적 감 7,429㎡
공 원 시 설	시 설 계		2,070.09	2,070.09	1	45.22	45.22	9	1,939.29	1,939.29	-	-	-	9	감 130.8㎡
	기 반 시 설	소계	1,170.46	1,170.46	-	-	-	-	1,084.88	1,084.88	-	-	-	-	감 85.58㎡
		도로	1,013.23	1,013.23	-	-	-	-	1,037.97	1,037.97	-	-	-	-	(증 24.74㎡)
		광장	157.23	157.23	-	-	-	-	46.91	46.91	-	-	-	-	(감 110.32㎡)
	조경시설		444.28	444.28	-	-	-	-	444.28	444.28	-	-	-	-	-
	휴양시설		410.13	410.13	-	-	-	9	410.13	410.13	-	-	-	9	-
	유흥시설		-	-	-	-	-	-	-	-	-	-	-	-	-
	교양시설		-	-	-	-	-	-	-	-	-	-	-	-	-
	운동시설		-	-	-	-	-	-	-	-	-	-	-	-	-
	편익시설		45.22	45.22	1	45.22	45.22	-	-	-	-	-	-	-	감 45.22㎡ (감 1동)
	관리시설		-	-	-	-	-	-	-	-	-	-	-	-	-
	도시농업시설														
	녹지 / 기타			17,657.91	-	-	-	-	-	10,359.71	-	-	-	-	-
시설율(%)(법정 % 이하)			시설율 : 10.49% • 녹지율 : 89.51% 												

나.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부호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동 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동 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합 계		-	19,728.0	2,070.09	1	45.22	45.22	9	-	12,299.0	1,939.29	-	-	-	9	부지면적 감 7,429㎡
기 반 시 설	계	-	1,170.46	1,170.46	-	-	-	-	-	1,084.88	1,084.88	-	-	-	-	감 85.58㎡
	도로	-	1,013.23	1,013.23	-	-	-	-	-	1037.97	1037.97	-	-	-	-	증 24.74㎡
	광장	가	157.23	157.23	-	-	-	-	가	46.91	46.91	-	-	-	-	감 110.32㎡
	진입광장	가-1	(157.23)	(157.23)	-	-	-	-	가-1	46.91	46.91	-	-	-	-	감 110.32㎡
조 경 시 설	계	-	444.28	444.28	-	-	-	-	-	444.28	444.28	-	-	-	-	-
	잔디마당	나	394.37	394.37	-	-	-	-	나	394.37	394.37	-	-	-	-	-
	식수대	다	49.91	49.91	-	-	-	-	다	49.91	49.91	-	-	-	-	-
	식수대1	다-1	(23.12)	(23.12)	-	-	-	-	다-1	(23.12)	(23.12)	-	-	-	-	-
	식수대2	다-2	(26.79)	(26.79)	-	-	-	-	다-2	(26.79)	(26.79)	-	-	-	-	-
휴 양 시 설	계	-	410.13	410.13	-	-	-	9	-	410.13	410.13	-	-	-	9	-
	휴게쉼터	라	410.13	410.13	-	-	-	-	라	410.13	410.13	-	-	-	-	-
	휴게쉼터1	라-1	(61.71)	(61.71)	-	-	-	-	라-1	(61.71)	(61.71)	-	-	-	-	-
	휴게쉼터2	라-2	(154.88)	(154.88)	-	-	-	-	라-2	(154.88)	(154.88)	-	-	-	-	-
	휴게쉼터3	라-3	(140.41)	(140.41)	-	-	-	-	라-3	(140.41)	(140.41)	-	-	-	-	-
	휴게쉼터4	라-4	(21.02)	(21.02)	-	-	-	-	라-4	(21.02)	(21.02)	-	-	-	-	-
	휴게쉼터5	라-5	(32.11)	(32.11)	-	-	-	-	라-5	(32.11)	(32.11)	-	-	-	-	-
	파고라	①	-	-	-	-	-	1	①	-	-	-	-	-	1	-
	전통정자-1	②	-	-	-	-	-	1	②	-	-	-	-	-	1	-
	전통정자-2	③	-	-	-	-	-	1	③	-	-	-	-	-	1	-
	평의자	④	-	-	-	-	-	6	④	-	-	-	-	-	6	-
편 익 시 설	계	-	45.22	45.22	1	45.22	45.22	-	-	-	-	-	-	-	-	감 45.22㎡
	화장실	마	45.22	45.22	1	45.22	45.22	-	-	-	-	-	-	-	-	감 45.22㎡
녹지 및 기타		-	17,657.91		녹지율 : 89.51%			-	10,359.71		-	녹지율 : 84.24%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540.76	1,013.23				증 24.74m ²
변경					560.47	1,037.97				
당초	소로	3	1	2.5	19.34	68.91	진입로	서측 경계	소로3-2	(증 0.07m ²)
변경	소로	3	1	2.5	19.34	68.98	진입로	서측 경계	소로3-2	
당초	소로	3	2	2.5	121.98	304.99	연결로	휴게쉼터1	휴게쉼터2	(감 0.04m ²)
변경	소로	3	2	2.5	121.98	304.95	연결로	휴게쉼터1	휴게쉼터2	
당초	소로	3	3	2.5	17.51	59.24	연결로	소로3-2	휴게쉼터3	(감 0.04m ²)
변경	소로	3	3	2.5	17.5.1	59.20	연결로	소로3-2	휴게쉼터3	
당초	소로	3	4	1.5	114.45	171.63	연결로	소로3-1	광장	(증 24.79m ²)
변경	소로	3	4	1.5	134.16	196.42	연결로	소로3-1	남측 경계	
당초	소로	3	5	1.5	93.23	141.10	연결로	소로3-4	소로3-2	(감 0.02 m ²)
변경	소로	3	5	1.5	93.23	141.08	연결로	소로3-4	소로3-2	
당초	소로	3	6	1.5	21.83	32.80	연결로	소로3-2	소로3-2	(감 0.02 m ²)
변경	소로	3	6	1.5	21.83	32.78	연결로	소로3-2	소로3-2	
당초	소로	3	7	1.5	16.08	24.18	진입로	휴게쉼터2	북측 경계	-
변경	소로	3	7	1.5	16.08	24.18	진입로	휴게쉼터2	북측 경계	
당초	소로	3	8	1.5	22.92	35.67	연결로	휴게쉼터1	소로3-7	-
변경	소로	3	8	1.5	22.92	35.67	연결로	휴게쉼터1	소로3-7	
당초	소로	3	9	1.5	3.89	5.83	연결로	휴게쉼터1	북측경계	-
변경	소로	3	9	1.5	3.89	5.83	연결로	휴게쉼터1	북측경계	
당초	소로	3	10	1.5	32.54	50.56	연결로	휴게쉼터3	소로3-5	(증 0.01m ²)
변경	소로	3	10	1.5	32.54	50.57	연결로	휴게쉼터3	소로3-5	
당초	소로	3	11	1.5	62.57	96.60	연결로	소로3-10	소로3-12	(감 0.01m ²)
변경	소로	3	11	1.5	62.57	96.59	연결로	소로3-10	소로3-12	
당초	소로	3	12	1.5	14.42	21.72	연결로	소로3-5	소로3-4	-
변경	소로	3	12	1.5	14.42	21.72	연결로	소로3-5	소로3-4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181호

인천광역시 버스전용차로(송림로) 폐지 고시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송림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에 대하여 버스전용차로를 폐지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7. 13.

인천광역시장

구간명	폐지구간	거리(km)	폐지기간	폐지사유	비 고
송림로	송림삼거리 ↔ 인천교삼거리 (양방향)	3.6	2023. 7. 13.부터	인천광역시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 미충족	장고개로 존치 (인천교삼거리↔동부제강)